전남도, 쌀 생산·가공·유통 4년간 3조원 투자

쌀 시장 완전 개방 대비 종합대책 추진

억대 부농 농가 2000호·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 육성

전남도가 쌀 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6개 분야 43개 사업에 3조원을 투입하는 '전남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분야별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산업 정예 인력 2만명, 억대 부농 벼 농가 2000호 육성, 수도권 쌀 시장 20% 이상 점유, 쌀 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 육성 등 5대 목표를 설정하고,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6대 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쌀산업 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장치 강화 ▲저비용·고효율 쌀 생산구조 전환 ▲전남 대표 브랜드 쌀 집중 육성 및 홍보 등을 꼽았다. 또 ▲첨단 도정시설 및 유통망 확충 ▲전남쌀 소비 촉진 및 판매 확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등도 포함됐다.

이들 과제 수행을 위해 전남도는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직불금·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들녘별 쌀 경영체 90개 소, 쌀 전업농 1만3000호를 육성하고, 벼 직파 재배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확대와 함께 쌀 브랜드를 기존 248개에서 110개로 정비할 방침이다.

생산·유통 거점별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10곳을 육성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330곳도 설치한다. 수도권에 전남쌀 공동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를 절감하면서 대량 소비처 및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촉도 강화하기로 했다.

쌀 가공식품 선도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업체의 상품 개발, 물류 및 마케팅 비용 등도 지원해 쌀 관련 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15년 고품질 쌀 생산 분야 6661억원, 생산비 절감 분야 428억원, 브랜드 육성 분야 135억원 등 모두 7956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커져가는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쌀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쌀산업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 구성 완료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 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두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새해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5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새누리당 추천 몫 5명은 서울고검 검사와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위원), 대검 검찰부장을 지낸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부산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이다.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김선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등 2명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 신현호 변호사 등 2명을 각각 지명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추천한 위원이 맡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석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세월호 배·보상법 논의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의장(오른쪽 부터)과 안효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농해수위 야당 간사,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배·보상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 성사땐 의제 제한 없어

■정부, 남북 당국회담 1월 제안 왜

정부가 29일 내년 1월중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격 제안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북한의 대남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신년사가 내년 1월1일에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北신년사에 앞서 제안…남북관계 주도 전략=남측의 제안에 북측이 화답하는 모양새로 국면이 전개된다면 정부로서도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연말에 대화를 전격 제안한 것은 정부가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는 점도 정부가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된다.

◇성사되면 남북장관급 회담 '부활'=정부는 북측이 호응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회담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이 류 장관 이름으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북측에서는 김 비서가 수석대표로 나오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되면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틀이었던 장관급 회담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北의 통준위 거부감이 변수…의제 제한없어=이번 회담 제안에 북측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북측이 그간 거부반응을 보여온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대화 제안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회담 성사를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북한이 통준위를 배제한 다른 형식의 대화를 역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측도 '김정일 3년 탈상'을 끝내고 6·15 선언 1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연다는 측면에서 남측의 대화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간 모든 의제를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은 물론 북측이 희망하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모두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남북 공동문화행사 개최도 논의될 수 있다. /연합뉴스

재판관 구성 문제점 헌재도 인정

헌법재판연구원 "독립성 부족"

통합진보당 해산의 '8대 1'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헌법연구관 4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헌재연구원은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11조 2~3항은 '헌재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각 추천한다. 여당과 야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여야 합의로 뽑는다. 헌재연구원은 이와 관련,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법원장의 지명 제도, 사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재판관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헌재연구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정당간 배분은 자질이 있는 재판관 선출을 보장하지 못하며, 정당의 성향에 따른 인물이 선출돼 정치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판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출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인물을 재판관으로 선출하기 위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이 시대정신과 가치,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생계형 사범 가석방 건의

새누리당, 대통령에

새누리당은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에 대해 사면과 가석방을 해줄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기업인 가석방'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국민 정서와 법의 형평성을 고려, 적용 대상을 기업인에서 생계형 사범을 포함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법적 혜택의 범위도 사면까지로 넓혀 '국민 통합'이라는 정치적 명분도 얻자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박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방안을 제안한 서청원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론화가 된 만큼 대통령께 건의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